

미국 바이든 재정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윤영교 (yoonyk@kdb.co.kr)

- ◆ 바이든 행정부는 '21년 들어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과 노후 인프라 개선 등에 거대 예산 투입을 결정함으로써 현대통화이론(MMT)에 기반한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강화
- ◆ 코로나 및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경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과의 합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 통화재정정책 기조를 임기 내내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우세

□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대응과 각종 인프라 확보에 유례 없이 큰 재정 투입 결정

- 바이든 행정부는 1.9조달러 규모의 7차 코로나19 경기부양법(3.11일) 통과에 이어, 2.25조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안(American Jobs Plan)을 발표(3.31일)
 - 이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인프라투자안의 1단계 계획으로, 주로 노후 사회간접자본 재건에 투입
 - 2단계 인프라투자안은 1~1.5조 달러 규모로 헬스케어, 교육, 노동자지원 등 주로 인적자본 재건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

미국 인프라투자예산안(American Jobs Plan) 주요 내용

(단위 : 억달러)

일자	지출액	주요 내용
운송인프라		
전통 인프라	4,470	고속도로, 철도, 공항, 항만 개·보수 등
전기차	1,740	구매 세제 혜택, 충전인프라 확충 등
부동산 관련 투자		
부동산 접근성 확대	2,130	주택 건설 및 개·보수 등
학교	1,000	학교 건설 및 개·보수 등
보건 및 보육시설	250	보육시설, 보훈병원, 연방건물 개·보수 등
기타 인프라		
전기시설 개보수	1,000	청정에너지 발전, 고전압용 전력선 투자 등
청정식수공급	1,110	식수 수질개선 등
통신서비스	1,000	통신서비스 가능 범위 확대 등
제조업 경쟁력 제고		
제조업 및 중소기업 지원	3,000	반도체 연구, 중소기업 R&D 지원 등
R&D투자 강화	1,800	기후관련 연구, 대학 연구 지원 등
양질의 일자리 창출	1,000	직업훈련 등
돌봄서비스 확충		
	4,000	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
총 액	22,500	

주 : 각종 언론 정리

- '21년 들어서만 총 5~6조 달러*에 달하는 경기부양 예산이 집행되거나 계획되면서 재원 조달 가능 여부 및 추후 재정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 제기

* 미국의 '20년 연간 명목 GDP(21조달러)의 23.8~28.6% 수준

- 미국의 '20년 정부부채는 '19년 대비 25.1%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,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'20년 초 78.4%에서 '21년 초 100.1%로 크게 상승*

* 미국 의회예산국(CBO, Congressional Budget Office) 추산

□ **바이든 행정부는 현대통화이론(MMT, Modern Monetary Theory)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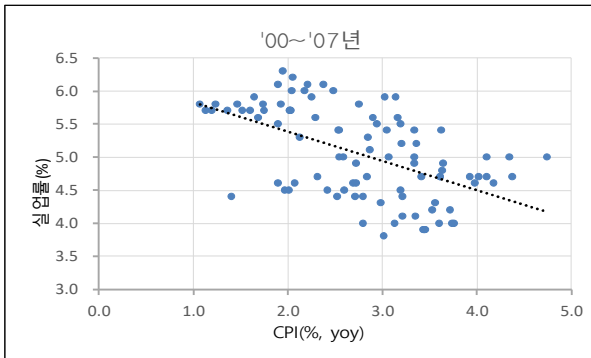
- MMT는 고용과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경우 적자재정과 저금리를 용인할 수 있다는 미국 경제학계의 소수이론*으로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음

* 스톤 브룩(Stony Brook) 대학 스테파니 켈튼 교수(바이든 당선인 경제정책 TF 위원)와 '20년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지지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주장

- 경제학 주류 이론과 MMT의 주요 차별점
 - 중앙은행이 아닌 행정부가 발권력 행사
 - 대개의 민간경제 주체의 예산계획과는 달리 행정부의 재정계획은 재정집행 시점에 이를 충당할 구체적 재정수입 계획의 즉각 수반이 불필요
 - 당장의 재정적자의 증가는 해당 위기상황 극복 이후 조세 등 유동성 회수 방안을 통한 사후 대처가 가능할 것이므로 통제 가능한 변수라는 입장
-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기존의 원칙을 배제하고 재정지출의 시의성(時宜性)을 강조함으로써 균형재정의 개념을 재정립*했다는 점이 핵심 사항
 - *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아닌 정부가 전체 경제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하는지 여부가 균형재정의 판단 기준, 다시 말해 완전 고용 달성을 단기적인 재정건정성보다 우선 과제로 설정
-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미국 재정적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, 실업률과 인플레이션간 역의 상관관계가 약해지는* 등 기존 경제학 이론에 배치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상(浮上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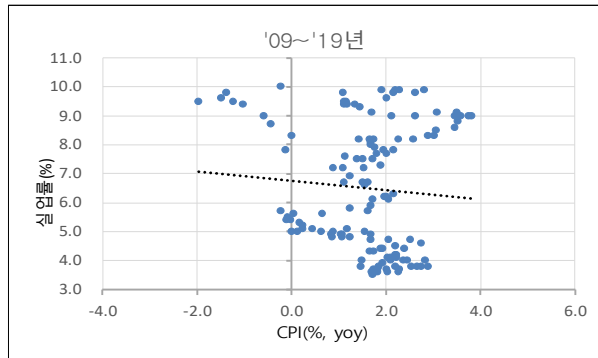
* 주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물가가 상승(수요>공급)하면 실업률이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실업률이 상승해야 하나 금융위기 이후 물가는 안정적임에도 실업률은 하락

2000년대 미국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관계



자료: Bloomberg

금융위기 이후 미국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관계



자료: Bloomberg

- '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재정정책의 규모가 커진 것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MMT에 기반한 정부(지출)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결과
 - '08년 금융위기 발생 후 미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정책 규모는 명목 GDP의 11% 내외*로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후 내놓은 경기부양패키지의 절반 수준
 - * '08년 미국의 명목 GDP는 14.7조달러이며 당시 재정정책 규모는 1.7조달러
 - 일각에서는 주류 경제학 이론을 근거로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의한 초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,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*에서 설득력 약화
 - * 미국의 통화회전율(M2통화량/명목GDP, 통화회전율이 높을수록 국가경제 내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)은 '07.4분기 1.97에서 '20.4분기 1.13으로 하락
 - * 연준 자산 중 금융기관 초과지급준비금(시중은행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법정 준비금을 초과해 예치한 금액) 비율이 '07.4분기 0.2%에서 '20.4분기 41%로 급등(비율이 높을수록 통화가 원활히 유통되지 않음을 시사)
 - 바이든 대통령은 '20년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 및 고소득층 소득세 세율 인상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비

□ 행정부가 제시한 인프라투자안은 정치 역학 관계의 영향에 따라 일부 내용 변경과 지연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우세

- 예산안은 하원의 경우 제적 의원의 50%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나 상원은 60%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 부담 요인
 - 현재 민주당은 하원 총 435석 중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, 상원의 경우 총 100석 중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 우세
- 다만 노후 인프라투자가 직전 공화당 정권(트럼프) 집권 당시 공약이라는 점은 양당의 합의 진통을 경감시켜줄 우호적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
 -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사용처 배분 등에 대한 일정수준의 논란은 불가피해 보이나, 미국의 인프라 노후화의 심각성*을 고려하면 양당의 합의 과정을 거친 후 통과 예상
 - * 미국토목학회가 '17년 발표한 '인프라 실적 평가(Infrastructure Report Card, 4년 주기로 발표)'에 따르면 도로, 교량 등 미국 인프라 등급은 D+로 총 10개 등급(A+등급~F등급) 중 8번째 등급으로 평가